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AI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여부 확인 절차와 운영 기준 마련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1 주요 목적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 제16조제3항,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2 주요 용어 및 기관



확인기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심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
학습·추론하여 예측·분류·생성 등 출력을 생성하는 알고리즘·프로그램 등

3 확인 제외 대상

- ❌ ① 법률상 생산·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제품·서비스
- ❌ ② 전자장치가 아닌 제품 등 AI가 활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제품·서비스
- ❌ ③ 이미 확인절차가 완료된 제품·서비스로, 구성 등에 변경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4 운영 핵심 포인트

- ✓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기관 시스템)
- ✓ 기술적 심사(TTA)가 AI 활용 여부를 검증
- ✓ 심사 결과 기반으로 15일 이내 결정 (필요시 연장 가능)
- ✓ 확인서 발급 및 전자 보관·재발급 가능

5 확인 절차 및 흐름 (한눈에 보기)

1 신청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확인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서
- 동의서(열람·이용, 개인정보)
- AI 구조도
- AI 연산체계-기능 명세서 등

조달청 목록화 요청 (물품목록번호 부여)

2 접수 및 검토 (확인기관)



신청서류 검토 및 제외대상 여부 검토

- 미비 시 30일 이내 보완 요청 가능
- 재보완 또는 반려 가능

3 기술적 심사 (심사기관 TTA)



다음 7가지 기준에 따라 기술적 심사 수행 (하단 '6. 심사 기준' 참조)

심사 결과를 확인기관에 통보

4 활용 여부 결정 (확인기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AI 활용 여부 결정

접수 후 15일 이내 결정 (필요시 30일 연장 1회)

5 확인서 발급



AI 활용으로 확인된 경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서' 발급

전자적 형태로 보관·재발급

모델이 유사한 경우 일괄 발급 가능

6 사후 관리



거짓·부정 확인 시 확인 취소

비밀유지의무 준수

6. 기술적 심사 기준 (7가지)

- ✓ ① 제품·서비스에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되어 있을 것
- ✓ ② 적용된 연산체계가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것
- ✓ ③ 입력된 데이터가 연산체계를 거쳐 유의미한 결과(예측, 생성 등)를 출력할 것
- ✓ ④ 구조도상 AI 기술의 위치가 명확하며, 제품·서비스 구동 체계와 결합되어 동작할 것
- ✓ ⑤ 연산체계가 제품·서비스의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됨이 확인 가능할 것
- ✓ ⑥ 연산체계가 적용된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 ✓ ⑦ 외부 연산체계 연동 시 호출 로그 또는 API Key를 확인 가능할 것



7 확인 결정 기간 및 보완



기본 결정 기간
• 접수 후 15일 이내 결정



연장 가능
• 제품·서비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



보완 요청
• 서류 누락·불명확 시 30일 이내 보완 요청
• 보완 미이행 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결정 가능

8 확인서 발급 및 관리



- ✓ AI 활용으로 확인된 경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서' 발급
- ✓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며, 재발급 요청 시 재발급
- ✓ 단순 외형·외관 차이 모델은 일괄 기재하여 하나의 확인서로 발급 가능

9 확인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사전 의견 청취 후 해당 확인을 취소

10 비밀유지 의무



확인기관 및 심사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11 KT에 미치는 영향 (주요 포인트)

① AI 활용 서비스 공공·B2B 사업 확대 지원



- ✓ AI 활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입찰·인중·조달 등 공공·B2B 사업 참여 용이
- ✓ AI 솔루션 신뢰성 및 시장 경쟁력 강화

② 내부 프로세스 사전 준비 필요



- ✓ 서비스 출시 전 확인 절차·서류 준비 (구조도, 명세서 등) 필요
- ✓ 조달청 목록화(물품목록번호) 사전 확보 필수

③ 기술·문서화 역량 강화



- ✓ AI 연산체계, 데이터 흐름, 기능·역할 명세 등 문서화 체계 고도화 필요
- ✓ TTA 기준(7가지)을 충족하는 설계·검증 체계 구축

④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강화



- ✓ 거짓·부정 확인 시 취소 위험 → 내부 검증 프로세스 필요
- ✓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보안·관리 체계 강화

⑤ 사업/모델 전략 수립



- ✓ 모델 변형·버전 관리 시 확인서 일괄 발급 활용 검토
- ✓ 확인 절차를 반영한 사업 일정·비용 계획 수립



스테이블 코인 한눈에 보기

정의 · 작동 원리 · 입법 동향 · 주요 규제 · KT 시사점



1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화폐(원화, 달러 등)와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토큰입니다.



1:1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법정화폐와
1:1 가치 연동

가치 변동성 최소화
(안정성 유지)

빠르고 저렴한
지급결제 수단

주요 유형

법정화폐 담보형

현금, 예금, 국채 등 안전자산을 100% 이상 보유

가상자산 담보형

가상자산을 담보로 초과담보(over-collateral) 방식

알고리즘 기반

스마트컨트랙트와 알고리즘으로 공급 조절

2 스테이블 코인의 작동 원리 (예: 원화 스테이블코인)

1

원화 입금



이용자가 발행기관에
원화를 입금

2

준비금 보관



발행기관이 입금액을
안전자산(현금·예금·국채)
등으로 보관

3

코인 발행(Mint)



입금액과 동일한 가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4

블록체인 전송



발행된 코인이
이용자 지갑으로 전송

5

자유로운 송금



블록체인 상에서
실시간 송금·결제

6

환매(Redeem)



코인을 발행기관에 반납
→ 원화 지급 및 코인 소각(burn)

가격이 1원에
유지되는 이유
(차익거래 메커니즘)

시장가격 > 1원 ↑

1원 입금 → 1코인 발행 → 시장 매도(이익)
공급 증가 → 가격 1원으로 수렴

시장가격 < 1원 ↓

시장 구매 → 1원 환매 → 코인 소각(이익)
수요 증가 → 가격 1원으로 수렴

핵심 요소



1:1 준비금
(신뢰의 기반)



즉시 상환권
(이용자 권리)



공시·감사
(투명성 확보)



스마트컨트랙트
(자동화·신뢰성)

3 스테이블 코인 입법 동향

국내 동향

-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추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적 근거 마련, 발행자 인가제(또는 등록제) 검토
- 준비자산 관리, 상환권 보장, 이용자 보호 · 공시 의무 논의
- 금융위원회의 중심 감독체계 구축, 지급결제 가능 규율

해외 동향

- 미국** (GENIUS Act, '25)
 - 연방(또는 주) 인가, 100% 준비금, 즉시 상환권 보장
 - 현금·국채 등 안전자산 보유, 월별 공시, 회계감사 의무
 - AML/KYC 의무 및 이용자 보호 규정
- EU** (MICA, '24 시행)
 - MIC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ART, EMT로 구분 규제
 - 인가, 자본금, 준비금, 소비자 보호, 투명성 관리 의무
- 홍콩** (Stablecoin Ordinance, '24)
 -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제도 도입
 - 준비금, 상환, AML, 외부감사 등 규제
- 싱가포르** (MAS 규제체계)
 - 준비금, 환매, 공시, 감사 요건 충족 시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

국내 감독 체계 (예정)



금융위원회
발행 인가, 감독, 제재



금융감독원
검사 및 건전성 감독



한국은행
지급결제 안정성 및
통화정책 영향 검토



FIU
자금세탁방지(AML)
감독

4 주요 규제 사항



발행자 규제

인가제, 최소 자기자본, 경영 건전성, 내부통제, 위험관리 체계 구축



준비금(Reserve)

100% 이상 준비금 보유 원칙
(현금, 중앙은행 예치금, 국채, 단기국채 등 안전자산)



상환권(Redemption)

이용자는 언제든지 1코인 = 1원(또는 1달러)
으로 즉시 환매 가능



준비금 공시

정기적으로 준비금 규모, 자산 구성, 유동성,
운용현황 등 공개



외부감사

독립 회계법인의 준비금 검증 및
회계감사 의무



AML/KYC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



이용자 보호

해킹 대응, 사고보상, 민원처리, 개인정보 보호,
이상거래 탐지 등



운영 리스크 관리

정보보안, 재해복구, 시스템 장애 대응,
내부통제 체계 구축

5 글로벌 규제 비교 (주요 항목)

규제 항목	한국 (논의 중)	미국 (GENIUS Act)	EU (MICA)	홍콩·싱가포르 (라이선스 체계)
발행 인가	추진 중	○	○	○
100% 준비금	추진 중	○	○	○
상환권 보장	추진 중	○	○	○
준비금 공시	추진 중	○	○	○
외부감사	추진 중	○	○	○
AML/KYC	○	○	○	○
이용자 보호	○	○	○	○
감독기관 승인	○	○	○	○

○ : 적용 또는 도입 예정

6 KT 시사점 (사업 기회 & 검토 포인트)

KT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회



AI 기반 이상거래탐지(FDS), AML 솔루션



클라우드 · AIDC 기반 블록체인 인프라 운영



디지털 지갑(KT Pay, PASS 연계)



온·오프라인 결제 및 정산 플랫폼



B2B 기업 간 디지털 결제 서비스



통신요금 · 콘텐츠 · 멤버십 결제



공공 · 지역화폐, 정부지원금 지급 플랫폼

주요 검토 포인트 (규제 리스크)



발행자 인가 대상 여부 및
금융회사와의 협업 구조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AML/KYC 의무 및 FDS 체계 구축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규제 준수



준비금 관리 구조(신탁·예치) 및
외부감사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및
분쟁처리 체계

7 핵심 시사점



- ✓ 스테이블코인은 차세대 지급결제 인프라로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 글로벌 규제는 "핵심 허용 + 은행 수준의 건전성·투명성·이용자 보호" 방향으로 수렴 중입니다.
- ✓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며, 발행자 인가·100% 준비금·상환권·공시·AML/KYC가 핵심 규제전입니다.
- ✓ KT는 금융·결제·클라우드·AI·보안 등 다양한 가치사슬에서 전략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6. 8. 28.
(제32조는 2027. 2. 28. 시행)



법률 제21392호, 2026. 2.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 044-205-2710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객관적·과학적 행정 실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1. 총칙

주요 목적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신뢰 기반 조성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대응성·신뢰성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주요 정의

- 인공지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
- 데이터**
기계 판독 가능한 정형·비정형 정보
- 인공지능기반행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행정
- 데이터기반행정**
데이터의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 등을 통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행정
-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2. 국가 등의 책무

1. 시책 수립 및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 마련
2. 제도 개선 및 기술 연구·개발
3.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 유지
4. 데이터 제공·연계·공동활용 적극 수행
5. AI 활용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해당 공공기관에 명확히
6.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
7. AI 및 데이터의 편향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고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우선 적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 추진 체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심의·조정)

- ✓ 정책·제도·법령 개선
- ✓ 기본계획 수립·변경
- ✓ 국가적 AI 활용 및 데이터 분석 필요사항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 기본목표·증상기 발전방향
- 법령·제도 개선
- 분야별 활성화 대책
- 데이터 연계·제공·공동활용 체계
- 전문인력 양성
-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



시행계획 (매년 수립·제출)

- 성과 평가 및 해당 연도 계획
- 예산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계획
-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등



4.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



등록
공동활용 필요 데이터(비밀 등 제외)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수집·활용
등록된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활용



제공 요청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소관 기관에 문서로 제공 요청



제공 범위
비밀·안보 등 제외, 기술적 분리 가능 시 해당 부분 제외 후 제공



제공 결정·통보
제공 또는 거부(사유 통보), 비용 부담 가능



거부 조정
거부 시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



민간데이터 활용
계약·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데이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 체결 지원



제공 데이터 관리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 파기 의무, 안전성 확보 조치

5.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제16조)



메타데이터·데이터관제도 체계적 관리 및 통합·연계 관리체계 구축·운영

표준화 (제17조)



AI 활용·데이터 분석 절차·방법, 메타데이터 관리 등 표준 제정·시행 (국내외 표준 조사·연구·국제협력 등)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제18조)



데이터 수집·통합·저장, AI·분석 지원, 연계·공동활용 등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책임관 (제19조)



각 기관별 책임관 임명 및 총괄·조정, 데이터 연계·공동활용, 신뢰성·위협관리 지원 등 수행 (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

분석센터 (제20조)



기관별 분석센터 설치·운영, 행안부는 통합분석센터 운영 (국가적·협업·기관 요청 사항 등 분석 지원)

전문기관 (제21조)



정책·기술 연구, 분석 지원, 데이터 등록·관리 지원, 전문인력 양성, 영향평가 등 다양한 업무 지원

실제 점검 및 평가 (제22조)



공공기관 자체 점검 후 제출, 종합·공개 및 우수기관 부서·공무원·직원 표창·표창

우수사례 발굴·보급 (제23조)



우수사례 발굴·표창·홍보 및 보급·확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24조)



수요 파악, 교육훈련, 직무표준·자재 지원, 고용창출 등 사책 마련 및 산·학·연 협력

민간·국제 협력 (제25조)



기술·인력 교류, 조사·연구, 공동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협회 설립 (제26조)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 인가 및 지원 (기술 전문, 제도 개선, 교육, 통계조사 지원 등)

6.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신뢰 기반 확보

공동기반 구축 (제27조)



공공기관이 공동 이용 가능한 AI 공통기반 구축·운영, 공공기관은 우선 이용 노력

역량 강화 (제28조)



공무원·임직원 대상 AI 교육 실시 및 전문가 등 지원 가능

학습용데이터 관리 (제29조)



학습용데이터의 품질 확보 및 기관 간 공유·활용 촉진

서비스 목록 관리 (제30조)



AI 서비스 현황 제출, 행안부가 목록 관리·매년 공표 (전문기관 위탁 가능)

윤리기준 (제31조)



AI 윤리기준 제정·공표 및 윤리 사책 마련, 교육 실시

영향평가 및 위험관리 (제32조)



도입 전 공공분야 AI 영향평가 및 결과 공표, 위험관리방안 수립·시행 (일부 예외)

법적 적용 (제33조)



전문기관 및 협회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의 죄에 적용



시행일

- 이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6. 8. 28.)
- 제32조(영향평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7. 2. 28.)



경과조치 주요 내용

- 기존 시행계획, 책임관, 전문기관 지정 등은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 기존 AI 도입·활용 기관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영향평가 실시·공표



관련 법률 개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산업법 등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용어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변경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주요 내용

피지컬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 이유

- AI 패러다임이 가상 세계를 넘어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빠르게 진화
- 우리나라는 SW 기술력, 제조업 가치사슬, 고도화된 AI 역량 등 3대 핵심 역량 보유
- 현행 법체계는 분절되어 있어 피지컬 AI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
- 이에, 통합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 마련



입법 목적



피지컬 AI의 연구·개발,
실증 및 상용화 촉진·지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용어 정의 (주요)



피지컬 인공지능
물리적 환경을 인식·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
피지컬 AI를 구현하여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결합체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피지컬 AI의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



시범지역
피지컬 AI의 실증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지역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
피지컬 AI의 연구·개발, 제조, 공급, 운영 등을 영위하는 자

주요 제도 체계

01 계획 수립

- 과기정통부 장관이 3년마다 '피지컬 AI 개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

06 데이터·안전·산업지원

- 학습데이터 구축 및 민간 무상 제공
- 개인정보·위치정보 익명처리 시 관련 법 적용 제외
- 영상·음성정보 수집·이용 특례
- 보험 가입 의무 및 정부 보험료 지원
- 행정·재정·기술 지원, 금융·세제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추진

05 규제특례 지원 강화

- 규제 적용 여부 확인 요청 제도
- 규제 특례,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지원
- 시범지역 내 일부 법률 적용 배제·완화 가능

02 거버넌스

- 국무총리 소속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

03 시범지역

-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지역 지정
- 위원회가 시범지역 운영을 정기적·수시로 평가

04 성능인증

- 피지컬 AI 시스템의 안전성 등 성능 인증
- 거짓·부정 인증 시 취소
- 결함이 있는 경우 사실 공개 및 시정조치

규제특례 혁신 (신속성·편의성 대폭 강화)



60일 신속 처리·간주 제도
· 규제특례 신청 시 60일 이내 결정
· 기간 내 거부 통지 없을 경우 '지정된 것으로 간주'



유효기간 확대
· 규제특례 유효기간 5년 (현행 ICT 특례 2년)
· 사업 연속성 보장



검토 기간 단축
· 관계 기관 검토 회신 기간 15일 (보완 시 최대 30일)
· *현행 30일



다부처 일괄 신청 (원스톱 서비스)
·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관련 규제특례를 일괄 신청 가능
· 여러 법령에 얽힌 절차를 하나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5대 핵심 포인트

1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전략적 추진

2 피지컬 AI 시범지역 도입



실제 물리 공간에서 실증 가능한 테스트베드 확보로 혁신 가속화

3 강력한 규제샌드박스



60일 승인·간주제도·5년 특례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

4 데이터 활용 특례



학습데이터 확보 및 실환경 데이터 활용으로 AI 성능·안전성 향상

5 산업 육성 패키지



데이터·인력·금융·세제·인증 등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로 산업 생태계 강화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국방인공지능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16355

유용원의원·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AI 기술은 미래 전장의 핵심이자 국방력의 혁신 요소
- 주요국은 국방 AI를 전략적으로 육성 중
-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국방 분야가 적용 제외 → 별도 법적 기반 부재
- 국방 AI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입법목적

국방 AI의 개발·도입·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안전성·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정립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 국방력 증진 및 국가 안보 강화



국가 안보
강화



국방력
증진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



국민의
안전 보호

주요 내용 (12대 핵심 과제)

1 기본방향 및 인적 개입 보장



- 국방 AI 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 안전성·신뢰성·책임성 확보
-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 개입 보장

(제3조)

2 기본계획 수립



- 국방부장관은 3년마다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인공지능 기본계획 등과 연계

(제5조)

3 추진체계(위원회)



-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인공지능위원회 설치
- 주요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의결
- 관계부처, 군, 연구기관, 전문가 등 25명 이내 구성

(제6조~제10조)

4 전문기관 설치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

- 정책 개발·국제협력 지원
- 기술동향 분석, 전략·정책 연구, 인력양성 등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

- 안전성·신뢰성 확보 전담
- 안전인증, 위험관리, 표준·기술연구, 시험평가지원 등

(제11조~제12조)

5 신속 전력화 특례



- 신속한 전력화 필요 또는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 무기체계 등의 획득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제14조)

6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 국방 AI 기술·데이터·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안전성·신뢰성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
- 국내외의 표준 연계 및 보급

(제15조)

7 학습데이터 관리 및 보안



-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책 마련
-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제16조)

8 민간 AI 기술 도입 및 활용



- 민간 AI 기술을 적극 발굴·도입
-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결정 시 적용 여부 검토·반영

(제17조)

10 전문인력·실증기반·데이터센터 조성



-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제20조)
- 실증기반 구축·운영(제12조)
-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제22조)

(제20조~제22조)

11 안전성 확보 및 위험관리



- 안전성 확보 시책 추진
- 전력 운용 간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해 위험관리 방안 마련

(제24조)

12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 AI 기술개발·활용 현황, 인력, 산업 동향 등 실태조사·통계·지표 작성·관리
-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가능

(제26조)

기대효과



국방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 체계 구축



신속한 전력화와
전투력
혁신 가속화



민·관·군 협력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표준화·데이터·인프라
기반의 지속 가능한
AI 발전



국제협력 강화로
국가 안보 및
국방력 제고

시행 및 준비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 위원회 위촉, 분과위원회·지원단 구성 등은 시행 전 준비행위 가능(부칙 제2조)

벌칙

-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지(제29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조)

기타

- 비밀 누설자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제28조)
-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제27조)

“책임 있는 국방 AI로 더 강한 국방, 더 안전한 대한민국”



전자금융업 제도 한눈에 보기

전자금융거래법 기반 전자금융업의 종류·인허가·준수사항·제재체계



근거법령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허가 방식
업종별 허가 또는 등록

1 전자금융업의 종류 (7개 업종)

① 전자화폐 발행·관리업 전자화폐를 발행·관리하는 업무	② 전자자금 이체업 전자적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	③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금융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즉시 이체하여 결제하는 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업무	④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재화·용역 구매에 사용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업무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결제정보 송·수신, 결제 및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업무	⑥ 결제대금예치업 (Escrow) 거래대금을 제3자가 보관·관리하는 업무	⑦ 전자고지결제업 (EBPP) 전자적 고지 및 요금 수납·결제를 수행하는 업무
--	---	---	---	---	--	---

★ 대표 업종 : 직불전자지급수단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2 전자금융업 인·허가(등록) 요건

자본금	법정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보유
인력	전문인력 확보
전산설비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설비 구축
재무건전성	법정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출자자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사회적 신용 확보

3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반드시 충족)

최소 자본금	허가·등록요건상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유지
자기자본	자기자본(총자산 - 총부채)이 0를 초과 유지
자기자본비율	전자화폐업·선불업 : 이상환잔액 대비 20% 이상
저위험자산 비율	총자산 대비 저위험자산(현금, 예금, 지급준비자산 등) 10% 이상 유지
미정산자금 보호	미정산잔액 대비 저위험자산 100% 이상 보유 (전자화폐·선불업 제외)
유동성비율	전자화폐업 60% 이상 / 선불업 50% 이상 / 기타 전자금융업 40% 이상

4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체계 ('25.12.16 시행)



5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의무

보호대상	선불충전금 전액
보호방식	예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자산운용	안전자산으로 운용
시행일	2024. 9. 15.
목적	이용자 충전금 보호 및 사업자 부실 위험 차단

6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보호 의무

보호대상	판매자 정산금 및 이용자 환불 목적 정산자금
보호수준	정산자금 전액
관리방식	외부기관을 통한 별도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2026. 1. 1.
법 시행	2026. 12. 17.
목적	정산자금 유용 방지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 강화

7 주요 준수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준수의무	주요 내용	위반 시 제재(예시)
최소 자본금 유지	허가·등록요건상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유지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기자본·유동성 기준 유지	경영지도기준(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준수	시정요구, 영업정지
구분회계 실시	전자금융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시정요구, 감독조치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	선불충전금 100% 예치·신탁·보증보험 및 안전자산 운용	영업정지, 등록취소 가능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별도관리)	시정요구, 영업정지 가능
이용자 자금 보호의무	이용자 자금 분리보관, 안전자산 운용 등 보호체계 유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가능
허위 등록·무등록 영업	허위 서류 제출, 무등록 영업 등 금지	등록취소, 형사처벌(벌금·징역)
감독당국 보고의무	경영현황, 중요사항 보고 등 법정 보고의무 이행	과태료, 시정요구

8 KT 관점 핵심 규제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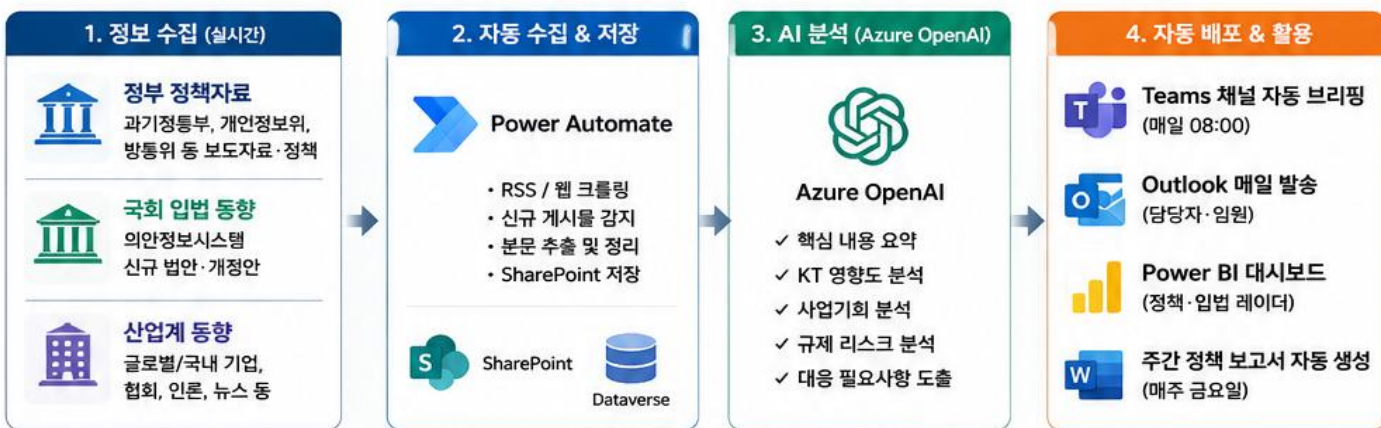
선불업	충전금 100% 보호 의무
PG업	정산자금 100% 외부관리 의무
재무건전성	자기자본·유동성비율 등 경영지도기준 준수
이용자보호	자금 분리보관 및 안전자산 운용
감독대응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제재 가능
신규사업	금융위 허가·등록 및 주요주주 적격성 심사

! 전자금융업은 이용자 자금 보호와 건전한 경영이 핵심입니다.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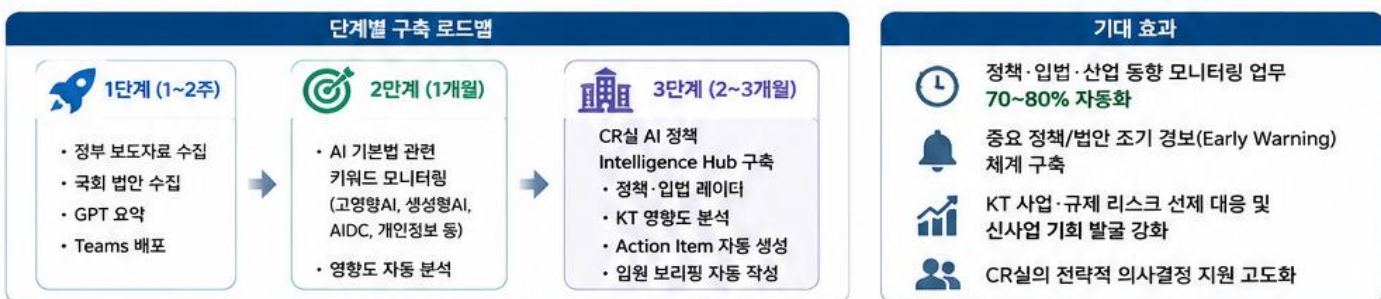
※ 기준일 : 2025.12.31. / 등록 전자금융업자 : 241개사(411개 업종)

AI 정책·입법·산업 동향 자동화 인텔리전스

실시간 수집 · AI 분석 · 시사점 도출 · 자동 배포로 KT의 선제적 대응력 강화



주요 분석 영역 및 결과 예시



공공 AI 영향평가 제도 도입 동향 및 KT 시사점

AI 기반 행정의 신뢰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공공 AI 영향평가 제도 본격화



법적 근거 및 시행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 '26.8.28 시행(공포 후 6개월)
- '27.2.28 영향평가 조항 시행



도입 목적

AI 활용 공공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행정 책임성 확보 및 AI 신뢰성 제고

- AI 안전·신뢰성 강화
- 책임 있는 AI 활용 기반 마련



적용 대상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AI 서비스 전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연구·제도화 현황

행안부 정책연구(전 완료) 및 NIA 세부설계 연구(진행 중)를 통해 평가 기준·절차 수립 중

- 정책연구 완료: '25.7월
- 세부설계 연구: '25.8월~

공공 AI 영향평가, 무엇이 다른가?

구분	AI 기본법 영향평가(과기정통부)	VS	공공 AI 영향평가(행정안전부)
핵심 목표	AI 기술 신뢰성·안전성 확보 → AI 산업 생태계 육성		AI 기반 행정의 책임성·신뢰성 확보 → 국민 기본권·권익 보호
주요 관점	AI 기술 자체 중심 (개발자/공급자 관점)		AI 활용 공공서비스 중심 (국민/행정수요자 관점)
대상	고영향 AI 시스템을 제공·이용하는 모든 사업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AI 서비스
법적 성격	노력 의무 (권고적 성격, 연성 규제)		의무화 추진 (행정절차상 의무, 강행 규정)
평가 주체	AI 이용사업자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검토·자문)		공공기관(도입기관) (행안부 지침 마련·감독)
책임 주체	사업자(개발·이용자)		공공기관장(최종 책임)
비유	엔진(AI 기술) 검사 → 부품이 잘 만들어졌는가?		완성된 자동차(공공서비스) 검사 → 실제 도로에서 국민에게 안전한가?

핵심 메시지

과기정통부 평가는 기술의 내재적 신뢰성 확보에, 행안부 평가는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 확보에 중점을 둠

평가 체계(안)

AI 서비스 전 생애주기 관리



사전 (도입 전)



운영 (도입·운영 중)



사후 (운영 후)

- 도입 타당성, 정책목표 적합성
- 성능 모니터링 및 드리프트 관리
- 편익·비용 분석, 대안 검토
- 보안·안전관리, 인간 개입(Human in the Loop)
- 데이터 품질·편향·기본권 영향 예측
- 책임타 지정, 이의제기 절차 운영
- 감사추적 및 변경관리
- 운영 결과 평가, 사용자 피드백 수집
- 위험 개선조치 및 시스템 고도화
- 지속적 모니터링 및 폐기계획 검토

8대 평가영역(핵심)

- 1 기본권 영향
- 2 차별·편향
- 3 설명가능성
- 4 인간 개입
- 5 안전성·성능
- 6 데이터 품질
- 7 책임 구조
- 8 위험 완화

KT

KT에 미치는 영향

- 법적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으나, 영향평가 과정에서 공급사업자의 기술·자료·설명 책임이 실질적으로 확대
- 모델 구조, 데이터 출처·품질, 편향성 검증, 성능 검증 등 상세 기술자료 제출 요구 증가 예상
- 설명가능성(XAI), 감사추적, 인간 개입, 이의제기 절차 등 요건이 공공사업 제안·조달 평가의 핵심 요소로 부상
- AI 서비스 구축 초기부터 영향평가 대응 문서 및 위험관리 체계 확보가 수주 경쟁력의 핵심



KT 대응 과제

- 1 제도 설계 동향 모니터링 및 정책 의견 개진
행안부·NIA 연구 및 시행령 제정 동향 지속 추적
- 2 공공 AI 영향평가 대응체계 사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편향성 검증, 설명가능성, 인간감독, 감사기록 체계 표준화
- 3 AI 기본법 영향평가와의 중복 최소화 추진
상호 인정 체계 마련으로 평가 부담 경감
- 4 KT AI 거버넌스 연계 공공 AI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공공 AX 사업 대상 영향평가 대응 프로세스 및 표준 산출을 확보
- 5 공공사업 경쟁력 강화
영향평가 적합성 및 위험관리 역량을 제안·입찰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

공공 AI 영향평가 제도는 '책임 있는 AI 행정'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KT의 선제적 대응이 공공 AX 리더십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젠슨 황 NVIDIA CEO 한국 방문 주요 일정 및 성과

AI 반도체 공급망 → AI 인프라 → 피지컬 AI · 로봇틱스 → AI 에이전트 · 게임 → AI 생태계 확대



방한 일정 (시간 순)

4/29 (화)	두산로보틱스 연구 센터 방문 (장녀 매디슨 황) • 로보틱스 생태계에 높은 관심 확인	
6/1~6/4 (월~목)	대만 타이베이 GTC 타이베이 2026 참가 • 기조연설 및 AI · 로보틱스 비전 발표 • "서울이 원한다면 기꺼이 서울에서 GTC를 열겠다" • 한국과의 협력에서 로보틱스를 핵심 분야로 지목	
6/1 (일) 저녁	대만 '르어차요(熱炒)' 회식 •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사이언스파크, 두산로보틱스, 네이버클라우드 핵심 관계자와 회식	
6/5 (금)	13:40 타이베이 → 서울 입국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 차터편 이용 입국 • "모든 파트너 · 고객에 감사 전하고자 방문" • "상반기 AI 인프라 구축 성공적, 하반기 더 바빠질 것" 14:00 T1 베이스캠프 흥대점 방문 • 메이커 등 T1 선수단 전원과 만남 • 팬 대상 친필 사인 강동 이벤트 (GeForce RTX 5090, RTX 스파크 중증) 19:00~ 형님저요 (삼겹살 소맥 회식) • SK 회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과 삼겹살 회식 • 시민들과 사진 촬영, 선물 나눔 (HBM, 행어, 버나나우유, 초코파이 등) • 계산은 이혜진 의장, 식당 손님 포함 500만원 상당 네이버페이 결제 21:30~ BBQ치킨 흥대입구점 (2차 치킨 회식) • 작년에 이어 2차 치킨 회식	
6/6 (토)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녹화 • 생애 최초 예능 출연 (방영: 6/10) • K-POP 예능자, 화사의 팬 • 'Good Goodbye', 'So Cute' 등 좋아해	
6/7 (일)	13:00 올티즌 PC방 신논현점 방문 • PUBG: 배틀그라운드 이벤트 현장 • 장영규 의장, 김철우 · 주키니(유튜버), 지수보이(해설가)와 만남 13:30 Portal PC방 방문 • 아이온2 서프라이즈 라이브 방송 게스트 참여 17:00 잠실야구장 두산 베어스 시구 • 두산 vs 키움 경기 시구 (시작: 백광현 두산 회장) • 시구 지도 · 객 로고 선수 • BBQ 치킨 113마리 전달에 나눔 • 유니폼 93번 착용 (1993년 NVIDIA 설립 의미) 19:00 간부치킨 삼성점 (간부 회식) • 회태원 의장과 치킨 회식 • 시민 · 기자들에게 치킨 나눠주기 • 회태원 의장과 맥주 러브샷	
6/8 (월)	10:00 서울대학교 방문 • AI연구원 및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11:00 삼성전자 회동 (전영현 부회장) • 신라호텔 인근 회동 예정 12:00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회동 예정 15:30 네이버 특별 라이브 (치치직) • 이혜진 의장과 약 13분간 라이브 진행 16:30 배경훈 부총리 면담 •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배라 루빈' 한국에 최우선 공급 약속	

* 상기 일정 및 시간은 언론 보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별 주요 성과와 의미

SK hynix • 차세대 HBM4-HBM4E 공급 및 공동개발 협력 강화 • 장기 공급계약 및 기술 협력 확대 •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Rubin) 협력	AI 경쟁력의 핵심이 GPU에서 HBM으로 이동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재확인
SAMSUNG • HBM4 공급 및 인증 진행 논의 • AI 메모리 공급망 다변화 협의	삼성의 엔비디아 공급망 복귀 기대감 확대 메모리 시장 경쟁구도 강화
SK telecom • 기가와트(GW)급 AI 클라우드 구축 • AI Data Center, AI Factory 협력 • 2027년 AI Factory 가동 목표	통신사가 AI 인프라 사업자로 진화 국내 AIDC 시장 성장 가속화
NAVER • Sovereign AI 및 AI Factory 협력 • 글로벌(중동·유럽·아시아) 진출 논의 • 한국형 AI 모델 생태계 확장	한국형 AI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 확인 국가 단위 AI 경쟁력 강화
HYUNDAI MOTOR GROUP •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제조 AI 협력 • 휴마노이드 로봇, Boston Dynamics 연계 확대	AI 산업 중심축이 생성형 AI에서 피지컬 AI로 이동
LG • 산업용 AI, 스마트팩토리, 로봇 협력 • 로봇 플랫폼 및 AI 기술 협력 강화 • 제조 AX 고도화	제조업이 AI 수요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AI+산업자동화 시장 확대
DOOSAN • 두산로보틱스 중시 협력 논의 • AI 기반 로봇·제조 자동화 협력	로보틱스를 차세대 성장축으로 설정 한국 로봇 산업 생태계 강화
T1 • T1 선수단 및 팬과 교류 • 게임·e스포츠 생태계 지원 강화 • GeForce 제품 브랜드 체험 확대	e스포츠·게임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하며 엔비디아 브랜드 가치 제고
NC SOFT • 생성형 AI 게임, 디지털 휴먼 협력 • AI 기반 콘텐츠 제작 및 개발 자동화	게임 산업이 AI 인프라의 핵심 수요처로 부상 AI 콘텐츠 생태계 확대
KRAFTON • AI NPC, CPC, AI 에이전트 협력 • 차세대 게임 인터랙션 개발 논의	게임이 AI 에이전트 상용화의 가장 빠른 시장 디지털휴먼 시장 성장 기대
SEOUL NATIONAL UNIVERSITY • AI연구원 및 로보틱스 연구소 방문 • 산학협력 및 인재 양성 논의	한국 AI·로봇 연구 생태계와 협력 강화, R&D 투자 확대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배경훈 부총리 면담 • 차세대 AI 가속기 '배라 루빈' 한국 최우선 공급 약속	정부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협력 강화 국가 AI 전략 가속화

KT 관점 시사점

1. AIDC · AI 인프라 경쟁 본격화 • 통신사 중심 AI 인프라 투자 가속화 • GPU, 전력, 냉각, 네트워크 등 통합 역량 필요 • KT도 GPU Cloud, AIDC, AI Factory 전략 강화 필요	2. 제조 AX · 피지컬 AI 확대 • 현대차, LG, 두산 등 제조 · 로봇 기업과 협력 확대 • 디지털트윈, 스마트팩토리, 국방 · 로봇 분야에서 KT 사업기회 확대	3. AI 에이전트·콘텐츠시장 성장 • 게임 · e스포츠 · 디지털휴먼이 AI 수요 성장 견인 • KT Cloud, GPUaaS, AI 미디어 플랫폼 사업 기회 확대	4. AI 생태계 · R&D 협력 강화 • 서울대 · 스타트업 · 연구기관과 협력 확대 • KT AI 연구, 오픈이노베이션, 인재 육성 전략 고도화	5. 정책 협력 및 국가 전략 연계 • 정부와 긴밀한 협력 필요 • 차세대 AI 인프라, 반도체 · 전력 · 규제 지원 정책 선제적 대응
--	--	---	---	---

이번 방한의 핵심 메시지: "한국을 HBM 공급기지에서 AI 인프라 · 피지컬 AI · AI 에이전트 생태계의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